'발언파문' 법조계 갈등 진정 조짐

이 대법원장 26일 유감 표명할 듯… 일선에서는 여진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변호사 비판 발언으로 촉발된 법조계 파문이 이번 주를 고비로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연이틀 강경 입장을 보였으나 23일 영암 월출산 산행에서 "자제와 절제가 필요한 시기다"라며 검찰 내부를 향해 더 이상 문제를 확산시키지 말도록 우회 당부했다.

서울변호사회가 22일 밤 개최한 창립 99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이나 변호사를 비하할 뜻은 없었다"고 해명하는 등 대법원도 사태 수습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기록 서류를 던져버리라"고 발언한 이후 나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26일 일선 지방법원 중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초도 순시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은 24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A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 법원 연설에서 나온 일부 발언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만큼 26일 서울중앙지법을 순시할 때 해명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명할 계획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이 대법원장이 '사법부도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통감하고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자'는 취지로 말했으며 검찰과 변호사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법원과 검찰 수뇌부가 이번 파문을 가라앉히려고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한동안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에 지난해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뒤 쟁점화됐던 공판중심주의 논란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사개추위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기로 했다가 검찰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놓고 사태를 수습했다.

검찰 수뇌부가 사태 확산을 원하지 않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없이 공판중심주의 논란의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변호사 단체는 이 대법원장의 표현 자체를 문제삼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기류와 표현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법개혁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기류가 엇갈리고 있어 25일 변협 상임위의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변협 지도부의 입장은 이 대법원장이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도록 회원들이 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이 사법부와 검찰 사이에서는 억지로 봉합된 공판중심주의 논란의 재점화로 번지고 있다면, 사법부와 변협 사이에서는 법조 직역(職域)의 위상 정립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인문학의 위기

전국 80개大 학장 선언 채택

전국 80여개 대학 인문대 학장들이 26일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한다.

조광 고려대 문과대 학장은 24일 "전국 80여개 대학 인문대 학장들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열리는 '인문주간' 개막식에서 인문학계가 맞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칭 '전국 인문대 학장협의회' 설립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장단이 발표할 성명서에는 인문학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인문학 분야 대학 신입생 모집을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학장은 "사회와 정부 당국 차원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행사가 인문학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인문학이 진흥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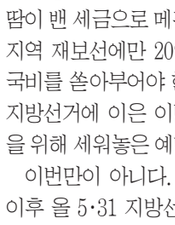
26~27일 학술진흥재단과 전국 인문대 학장단이 개최하는 인문주간 첫 행사의 주제는 '열림과 소통으로서의 인문학'으로, 이어령 전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이 주제에 대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인문학과 동아시아의 인문전통'과 '디지털 문화와 인문학', '인문학과 한류문화' 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도 함께 열린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선거에 거덜나는 살림



정후식 정치부 차장

10·25 재·보선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간 공천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해남·진도,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지 5개월도 채 안돼 군수를 다시 뽑는 화순, 신안이 그 대상지역이다. 각 정당의 후보가 확정되면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3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와 자천타천 거론되는 입후보 예정자만 40명에 육박해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을 훨씬 웃돌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밑바닥 정서를 훑어보면 이번 재·보선 역시 '그들만의 잔치'에 그칠 공산이 높다. 되풀이되는 군수 궐위사태에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과 선거 무관심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하나같이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로 사법처리돼 중도하차 했다.

주민들 사이에선 "표 찍을 때 후보 검증 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줄서기와 편가르기에 급급했던 탓"이라는 자성도 나오고 있지만 만신창이가 된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탄식, 당선을 위해선 불법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일고 있다.

유권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개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을 주민들의 피땀이 밴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남지역 재보선에만 20억원 이상의 자치단체 예산과 국비를 쏟아부어야 한다. 화순군과 신안군은 5·31 지방선거에 이은 이번 예산부담으로 재해복구 등을 위해 세워놓은 예비비까지 거덜 날 지경이다.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이후 올 5·31 지방선거 이전까지 4년동안 전남지역에서는 모두 6차례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져 도지사 1명, 시장·군수 5명, 도의원 5명, 시·군의원 21명 등을 다시 뽑았다. 이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 추가 부담액은 규모가 가장 컸던 2004년 6·5 재·보선의 110억원을 포함,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에 허덕이는 이들 자치단체에겐 예정에 없는 예산지출로, 엄청난 부담만 떠안은 셈이다. 행정력 낭비 또한 막심하다.

이런 점에서 군수나 국회의원의 개인 비리나 불법 행위로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당사자와 해당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 선거비용을 분담케해야 한다는 제안은 설득력이 있다. 유권자들도 '차라리 관선시대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한탄 대신 이번만큼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who@kwangju.co.kr

"法·檢·辯 같은 배 탄 동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부장판사 법조 '동료의식' 강력 비판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파문과 관련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가 후배 판사들에게 "법관은 검사·변호사와 동료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 반성을 촉구하고 검찰·변호사를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국내 법관 2천여명 중 14% 안팎인 280여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대형 사건 1심 재판의 대부분이 처리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는 형사수석부장은 형사재판부를 총괄하는 자리여서 이번 이메일은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상훈(50·사시 19회·사진)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2일 형사부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이 법관과 법원 직원을 상대로 말씀하신 것을 갖고 외부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부터가 옳은 일이 아니고, 검찰이나 변호사단체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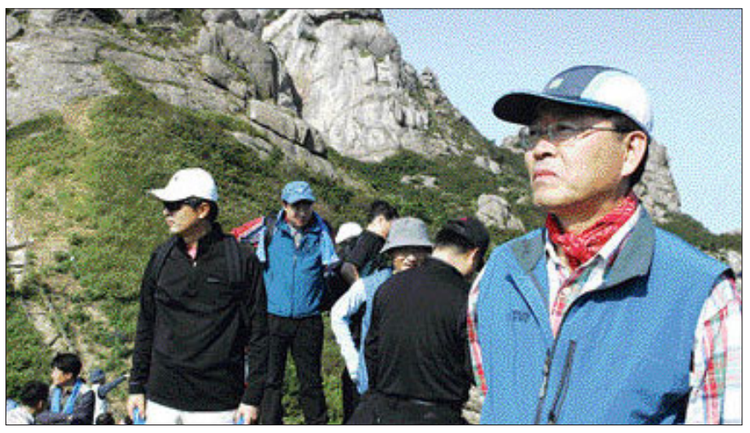
그는 "검찰의 상대방은 피의자나 피고인이다. 어찌 법원, 법관이 검찰의 상대방인가. 변호사는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일 뿐이다. 주된 활동무대 중 하나가 법원일 따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사라졌어야 한다. 전혀 다른 직역(職域)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달갑지 않은 동료의식을 내세우는 표현 같아서 유쾌하지 않다"며 불편했던 속내를 들어냈다.

이 부장판사는 변호사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자기의 할 일만 잘하면 된다. 판사는 변호사와 같은 배를 탄 동지가 아니다. 물론 적도 아니지만, 각각 역할이 전혀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여전히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조서를 '꾸민다'고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 '산다'고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의식이고, 그런 의식을 갖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회사법 박사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5부 재직시 '삼성 에버랜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혐의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행사해 주목받았으며 대법원은 그의 공판중심주의 전문 능력을 인정해 지난달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전보 발령했다./연합뉴스

정상명 검찰총장 광주 고·지검 직원들과 월출산 산행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변호사 비하 발언으로 촉발된 법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명 검찰총장이 23일 광주 고·지검 직원들과 함께 월출산에 올라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검사들 절제된 행동이 중요"

정상명 검찰총장은 최근 평검사들의 대법원장 비판과 관련, "절제된 행동이 중요하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정 총장은 지난 23일 정진호 광주고검장, 명동성 광주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 120여명과 함께 한 영암 월출산 산행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이미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강조한 것처럼 자제와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검사들의 마음은 알지만 절제된 처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과 관련, '유감 표시' 여부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정 총장은 대법원과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 월출산을 찾았다"며 "서울에 올라가서 대책을 논의토록 하겠다. 아직은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30분께 시작된 산행은 오후 1시30분께까지 이어졌고 정 총장은 영암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오후 4시40분께 KTX를 타고 서울로 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법원노조 '대법원장 퇴진 발언' 비판

전국 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곽승주)는 23일 광주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2006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진사퇴와 탄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또 한번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원노조는 이날 "국민적 염원을 대신해 법조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대법원장에게 사퇴 운운하는 것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변협의 '대법원장 사퇴' 입장과 관련, 25~26일 전국 10여개 노조지부별로 변협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변협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일제히 걸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